

주간 통일정세

2015-16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한점의 불씨라도 보낸다면 본거지 괴멸시킬 것”(4/24,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전승기념관)에서 당과 군, 정부기관 일꾼, 북한 주재 외교사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인민군 창건 8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거행했으며 리영길 군 총참모장은 보고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한반도에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며 “만약 원수들이 공화국 영토에 단 한점의 불씨라도 날려보낸다면 본거지에서 완전 괴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 그는 또 최근 북한이 적 해상 목표에 대한 타격훈련과 최첨단 신형 반함선 로켓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며 섬 화력 타격 및 점령 연습과 비행장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공개함.
 - 이날 보고대회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최태복·김양건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제1부부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는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북대화 기대한다고?...꿈도 꾸지 말라”(4/2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대화를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체제대결, 전쟁대결 책동에 미쳐 날뛰는 한 우리와의 대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남북관계 성과를 기대한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통일부의 남북회담 시나리오 개발 사업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전쟁연습에 광분하는 자들이 대화 냄새를 피워대는 것이 파렴치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북남사이 대화와 협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선차적인 조건은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부터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것에 남한 당국이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경비정 1척, 서해NLL 침범했다 북상…“기관고장”(4/21, 연합뉴스)
 - 북한 경비정 1척이 21일 오전 기관 고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북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합참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2시43분께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백령도 북방 NLL을 0.4 노트컬마일(700여m) 침범했다가 북상했다”면서 “이 경비정은 기관 고장으로 3km를 표류하다가 NLL을 넘어왔다”고 말함.
 - 그는 또 “북한은 고장이 난 경비정이 NLL을 넘기 전에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기관 고장이 났다. 예인해가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전함.
 - 올해 들어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에는 어선과 경비정 등의 NLL 침범이 30여회에 달했다고 뉴스는 밝힘.
- 국방부 “연평도앞 北무인도 시설공사 예의주시”(4/23, 연합뉴스)
 - 국방부는 23일 북한군이 연평도와 가까운 북방한계선(NLL) 이북 무인도에서 미상의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연평도 북방 4.5km에 있는 '갈도'라는 작은 섬에서 미상의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군은 공사의 목적을 포함해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함.

- 북한군은 1개월 전부터 갈도에 소수의 병력을 보내 수작업으로 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고 있으며 중장비는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마. 남북 경제 관계

- 개성공단 기업 3곳, 정부 지침 반해 임금지급(4/20, 연합뉴스)
 - 개성공단 입주기업 3곳이 3월분 임금지급 시한인 20일 정부 지침에 반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입주기업 20여 곳이 임금지급 시한에 맞춰 북측에 정부의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북측은 일단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받겠지만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준으로 차액분에 대해선 연체료를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연체료 부과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하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기업에) 담보서에 서명해 제출하는 것을 자제토록 했으나 3곳은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는 전함.
- 北, 24일까지 개성공단 임금납부 유예(4/22, 연합뉴스)
 - 통일부는 22일 오전 11시30분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서 24일까지 임금납부를 유예한다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에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전해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북측이 우리 측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4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번 주내에 남북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연체료 부과 등 기업에 대한 북측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됨.
- 개성공단 18개기업 임금납부…정부 “위반기업에 상응조치”(4/24, 연합뉴스)
 - 정부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지급 시한인 24일까지 파악한 임금 납부 기업은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들은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

- 4.19혁명 55주년 즈음 “지금 남조선은 과거의 유신 독재시기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실은 4월 인민봉기자들의 넋을 이어 외세와 매국노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대중적 투쟁으로 부르고 있다’고 정부 비난 및 투쟁 선동(4.20, 중앙통신·노동신문)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배상 및 보상지급기준 발표 관련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천하의 시정배, 수전노들’이라며 ‘비열한 광대극을 더 이상 연출하지 말고 민심의 요구대로 사건진상규명과 선체인양, 책임자 처벌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4.20, 평양방송)
- 韓美연합 ‘맥스썬더’와 ‘쌍용’ 훈련은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형적인 공격연습, 핵실험 전쟁’이라며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 어떤 대화도 관계개선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4.21, 중앙통신·노동신문)
- 韓-美 국방부 장관의 대담과 韓-日 제10차 안보정책협의회에서의 발언(북핵 위협, 공동대처 등) 관련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궤변”이라며 ‘美日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을 위한 군사적 공모결탁은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파는 짓’이라고 비난(4.21,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91호(4.24)】 우리 경찰의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진압 관련 ‘박OO 패당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낸 천인공노할 반인륜적·반인권적 만행’이라고 비난하며 ‘괴뢰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연재가도 참다운 삶을 누릴 수 없고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피할 수 없다’고 ‘反정부 투쟁’ 선동(4.24, 중앙통신·중앙방송)
- 韓美 ‘독수리’ 훈련 종료(4.24) 관련, 남한이 “북침전쟁연습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없이 대화·관계개선을 떠들고 있다”며 ‘우리(北)는 괴뢰패당과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무자비한 초강경 대응전으로 북침핵전쟁연습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이라고 위협(4.25, 중앙통신·민주조선)
-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집회 진행 관련 ‘청와대에로의 시위행진을 경찰병력이 무차별적 진압을 감행했다’고 비난하며 ‘지금 온 겨레가 반인민적·반인권적인 괴뢰패당을 반대하여 들고 일어났다’고 왜곡 주장(4.26, 중앙방송)

바. 남북 사회 관계

- 탈북단체, 대북전단 15만장 또 살포(4/22,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2일 “21일 오후 2시 인천시 강화군 봉천산에서 미국인권재단(HRF) 관계자와 함께 대북전단

15만장과 '더 인터뷰' USB·DVD 각 2천500개씩 총 5천개를 풍선에 달아 날려보냈다”고 밝힘.

- 오는 26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석차 25일 출국 예정인 박 대표는 “출국 전에 한번 더 풍선을 날릴 계획이며, 다른 제품 사용 등 더 정확한 GPS 추적 방식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함.

■ 유진벨재단, 북한 결핵환자 치료차 방북(4/23, 연합뉴스)

- 북한 내 결핵치료 지원사업을 해온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은 23일 중증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방북단이 지난 21일 북한으로 출발했다고 밝힘.
- 인세반 유진벨재단 회장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북단은 앞으로 약 3주에 걸쳐 평안도, 황해도, 평양 등에 위치한 12개 결핵치료시설(제3요양소)에서 다제내성결핵(중증결핵) 치료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한미 국방협업체 비난…“북침 핵공격 기도”(4/23, 연합뉴스)

- 북한의 ‘북침 핵전쟁연습 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대변인 담화에서 KIDD 회의의 결과물에 대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흉악한 기도”라고 주장함.
-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것이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하려는 의도라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도발자·교란자는 바로 미국과 괴뢰패당”이라고 비난함.
- 이어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핵선제 공격 기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침 핵전쟁도발의 본거지들과 거점들을 우리 식의 무자비한 선제타격으로 초도화해 버릴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남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한미 사드 도입 논의 핵전쟁 위험 증대”(4/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이야말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지역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길이가 길지 않은 한반도를 작전무대로 해 고고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함.
 - 북한은 이어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남한이라며 “현실은 우리의 핵 보유가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반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함.

- 북한, 미국 인권행사 앞두고 “우리 인권문제 없어”(4/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논평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하에서는 ‘인권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우리 나라를 썩어빠진 인권공세로 어찌보겠다는 것은 가소롭다”고 폄하함.
 - 이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백인 경관의 흑인 총격 사건과 이라크전 당시 미군의 포로학대 사건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야말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 인권의 불모지”라고 비난함.
 - 나아가 미국의 대북 인권공세는 군사적 침략을 노린 것이라면서 “미국의 악랄한 인권공세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셔 버릴 것”이라고 다짐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미국 국무부, 북한 여행경보 다시 발령(4/26, 연합뉴스)

- 2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국무부 영사국은 자체 홈페이지에 “미국 시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북한 당국이 자국의 형법을 임의로 적용하면서 체포 또는 장기구금의 위험이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공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푸틴, 러시아 북한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승인(4/21, 연합뉴스)
 - 법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통령령을 통해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관한 내각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북한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조약에 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함.
 -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할 조약은 양국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상대국 인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조약 체결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러시아 대학에 김정은 저서 등 기증(4/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선 도서들이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국립사범종합대와 극동연방종합대학 나호드카 분교에 기증됐다”며 14~15일 기증식을 열었다고 전함.

아. 국제기구

-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논의(4/22,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북한이 지난달 강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와 대북제재 명단 갱신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은 유엔 주재 스페인 대표부의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활동 및 최근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북한 미사일 발사, 유엔 대북제재 명단 갱신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유엔의 대북제재 명단은 매년 갱신되고 있는데, 올해 대북제재 명단에 제재 대상과 품목을 추가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아세안에 ‘공식 파트너십’ 관계 요청(4/26, 연합뉴스)
 - 북한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에 ‘공식 파트너십’을 요청해왔다고 말레이시아 외교부의 고위 관리가 25일(현지시간)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오스만 하심 사무국장은 북한이 노르웨이, 에콰도르, 몽골과 함께 아세안과 공식 파트너십 관계를 요청했다고 밝힘.
 - 하심 국장은 아세안과의 파트너십에는 상이한 카테고리가 있다면서 아세안은 파트너십을 요청해온 국가별로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적합한지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자. 기타 국가

- 북한, ‘대미관계 개선’ 쿠바에 구애의 손길(4/2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1일 김일성 103회 생일을 맞아 전날 주북 쿠바 대사가 마련한 연회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장, 신흥철 외무성 부상 등이 초청을 받아 양국의 전통적 친선을 다짐했다고 전함.

- 양 부위원장은 연회 연설에서 "쿠바 인민이 해마다 우리 인민과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것은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과시"라고 강조함.
- 그는 또 "쿠바와의 전투적 친선과 단결의 유대를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의 길에서 언제나 형제적 쿠바 인민과 한 전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뉴질랜드, 내달부터 북한 서해안 철새 공동조사(4/24,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북한과 뉴질랜드의 '미란다 자연기금'이 다음달 2일부터 북한 평안남도 남포시와 온천군 등 서해안 일대에서 도요새 등 철새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 지난 2009년 북한과 미란다 자연기금이 평안남도 문덕지역 철새 서식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공동조사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 거부로 중단되기도 했다고 방송은 밝힘.

- 조선인민군 대표단(단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육군대장), 4월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의 '국제안전에 관한 토론회' 참가 후 귀환(4.20, 중앙통신)
- 마살군도(*태평양 중서부 섬나라)가 미행정부를 미연방재판소에 기소(핵무기 감축공약 미이행)한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응당한 귀결"이라며 '미국은 인류에게 핵참화와 핵전쟁 위협을 가해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주장(4.21, 중앙통신·민주조선)
- 일본 자민·공명당의 새 '안보법' 개정(자위대의 미국 등 동맹국들 군대 후방지원) 합의에 대해 "일본에 남은 것은 팽창된 무력을 해외에 내보내어 마음껏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일본의 재침전쟁도발' 우려(4.22, 중앙통신·민주조선)
- 한국에 '싸드' 배치설 관련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준비를 갖추는 것과 함께 세계지배전략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 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에 재앙의 불을 지피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4.23, 중앙통신·노동신문)
- 러시아정부 경제대표단(단장 :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원동발전상), 4월 24일 北-러 정부사이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도착(4.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이란 대사, 4월 24일 김일성 생일을 즈음하여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정영수(노동상)·김정숙(대외문화연락위원장) 등을 초대한 가운데 연회 마련(4.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 조선인대표단(단장 : 남승우 「총련」 부의장), 미림승마구락부·평양시버섯공장 등 여러 곳 참관(4.2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원유공업성 대표단(단장 : 배학원 원유공업상), 4월 25일 러시아 향발(4.2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베트남 친선협회 대표단(단장 : 서호원 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4월 25일 '남부 베트남 해방 및 통일 4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베트남 향발(4.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정부 경제대표단(단장 :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원동발전상), 4월 25일 해방탑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4.25,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조선인 대표단·재일동포 조국방문단·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표단, 4월 25일 각각 평양 출발(4.2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리룡남 대외경제상, 4월 26일 러시아연방 경제대표단과 평양에서 회담 진행(4.26,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백두산 오른 북한 김정은 발전소 건설장도 시찰(4/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黨 제1비서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했으며 최룡해 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했다고 보도함.
 - 그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인 삼지연군과 혁명 전적지들이 있는 량강도의 인민생활과 경제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노동당 창건 일흔돌까지 1호와 2호 발전소 건설을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주문함.
 - 김 黨 제1비서는 또 "발전소 건설을 경제실무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며 완공일에는 자신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들의 대합창 공연을 진행하고 발전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원산 고아원 건설현장 시찰(4/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원산 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셨다"며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김 黨 제1비서를 수행했다고 전함.
 - 건설현장을 둘러본 김 黨 제1비서는 보육실, 교양실, 아동도서실, 자연관찰실,

목욕실, 물놀이장 등 시설이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시공됐으며 동심에 맞게, 창발성과 자립성을 키워줄 수 있게 잘 꾸렸다”고 만족감을 보였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군의 과업은 전투준비 완성하는 것”(4/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24~25일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를 성대히 진행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연설에서 “오늘 인민군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은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투준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당부함.
 - 그는 이어 “훈련은 인민군대의 주업이며 싸움준비”라며 “전시에는 싸움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지만 평시에는 훈련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고 애국자”라고 강조함.
 - 김 제1위원장은 “훈련혁명 수행의 중심 고리는 훈련을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하는 것”이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함.
 - 그는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높은 행군능력, 수영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리영길 총 참모장은 대회보고에서 “김일성·김정일 원수님들의 주체적인 군사훈련사상과 백두산훈련 전통이 최고사령관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면서 “김 제1위원장이 군력 강화의 4대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셨다”고 찬양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김영남, 인도네시아서 활발한 정상외교(4/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 위원장이 22일 헤리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과 아나스타스 무레케지 르완다 수상, 호르헤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각각 만나 양국 친선관계를 논의했다고 24일 전함.
 - 한편 김영남 위원장은 반동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을 가져오려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남조선 당국의

반통일적 자세로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 앞길에는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는 미국의 핵 포기 요구와 인권문제 비판에 대해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인류에게 핵 참화를 들썩운 유일한 국가이며 세계 최대 인권불모지인 미국이 핵 포기와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하기도 함.

■ 북한 김영남, 반둥회의서 광폭 정상외교(4/25, 조선중앙통신)

- 김 상임위원장이 22~23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쑹영편상 베트남 주석,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과 연이어 만나 관계강화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함.
- 그는 브라힘 마흐라브 이집트 총리와 헤리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아나스타스 무레케지 르완다 수상, 호르헤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부통령도 만나 양국 친선관계를 논의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혁명적 신념 버리지 말자”...내부 결속 다지기(4/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정론 ‘백두산으로 오르자’에서 지난 18일 새벽 김 제1위원장이 백두산에 오른 사실을 언급하며 그의 집권 3년을 ‘백두의 행군길’로 표현함.
- 그러면서 “탁월한 선군영장,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창조의 거장”으로

대표되는 김 제1위원장의 통치 근거에는 “백두산악과도 같은 혁명적 신념이 있다”고 역설함.

- 신문은 서방의 경제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 등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거론하며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혁명의 주력이 되어야 할 새 세대들이 자기 근본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함.

■ 북한, 25일 건군절 맞아 대규모 군사훈련 가능성(4/23,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3일 ‘선군혁명의 역사를 개척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이란 제목아래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투쟁을 조명하면서 ‘선군’을 강조함.
- 신문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의해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장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높이 모셔야 한다고 역설함.
- 신문은 또 2면 전체를 군을 창설한 김일성의 젊은 시절 원수복 차림의 모습과 군부대 활동을 컬러 사진으로 채웠으며 연합뉴스는 북한 군 창설자인 김일성 주석을 앞세워 세습체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어지도록 선전선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박봉주(내각총리), 수산성 몽금포수산기지 건설장 현지요해(4.21, 중앙통신)
- 제30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식, 4월 22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및 최태복(당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최상건(국가과학기술위원장)·김승두 교육위원장·철(국가과학원장) 등 참석(4.22, 중앙통신·중앙방송)
- 前 「총련」 일꾼들(윤덕근 재일본조선인 교육회 초대 회장 등) 유해, 4월 22일 애국열사릉에 안치의식 진행 및 김영대(최고인민회의 상임총 부위원장/추모사)·김진국(해외동포사업국장) 등 참가(4.22,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당 제1비서, 4월 23일故 리종욱(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빈소에 화환 전달(4.23,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당 제1비서, 모범학습 강사들(보통강구역 양정사업소 노동자 조세오 등)에게 감사 전달(4.24, 중앙방송)
- 인민군 창건(4.25) 83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4월 24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4.24, 중앙방송·중앙통신)
- 황병서·현영철·리영길·김원홍 등 인민군 지휘성원들, 4월 25일 0시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4.25)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25, 중앙통신)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박봉주 내각총리·로두철 내각부총리 등 참석) 및 ‘김정일 유훈관철과 1/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결함을 심각하게 분석 총화하고 2/4분기에 수행해야 할 과업과 방도 토의’(4.25, 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정은 저작(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발표('12.4.20) 즈음 '김일성의 黨과 혁명의 만년초석 마련 등 업적' 찬양 및 '김정은의 계승 발전 의지' 강조(4.25, 중앙통신·노동신문)
- 제30차 중앙과학기술축전, 22日 개막 이후 과학자, 기술사들,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과 기대 속에 성황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4.26, 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삭섬에 과학기술전당 건설...당 창건일 완공(4/21,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1일 1면 사설에서 “과학기술전당은 노동당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건설하는 대상 중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며 “과학기술전당 건설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 나가자”고 독려함.
 - 평양 대동강 삭섬에 건설 중인 과학기술전당은 과학기술 자료를 전산화해 과학자와 기술자, 교육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 서비스센터’ 역할을 하게 되며 연 건축 면적이 10만㎡에 달하는 거대한 원자구조 모양의 건물로 1980년대에 완공된 인민대학습당과 거의 비슷한 크기로 지어진다고 연합뉴스는 밝힘.

나. 주요 후속 조치

- 북한, 압록강변에 관광특구 건설 중(4/19, 로시이스카야 가제타)
 - 북한이 압록강 대교 근처의 자국 강변에 중국인 등을 포함한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특구를 건설하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로시이스카야 가제타’가 19일(현지시간) 보도함.
 - 신문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외국 학자를 인용해 북한이 중국과

합작으로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 근처에 관광특구를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특구 조성 자금은 중국 기업이 대고 이익금은 북한과 나누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소개함.

- 관광특구 예정 부지에선 지난달 말부터 강변 강화와 부두 건설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으며 4~6개월 뒤 특구가 문을 열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함.

■ 북한, 백두산도 문 연다…관광 다각화 총력(4/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백두산이 행정구역에 속하는 삼지연군 무봉노동자구 일부 지역에 무봉국제관광특구를 설립한다고 밝혀, 본격적인 백두산 국제관광 시대를 알렸다고 전함.

다. 경제 상황

■ 세계은행 “북한 어린이 6명중 1명 영양실조”(4/22,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은행이 지난 19일 공개한 ‘2015년 세계발전지표’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영양 섭취 부족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5살 미만 북한 어린이가 전체의 15%에 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함.
- 북한에서 5살이 되기 전 사망하는 유아의 수는 2013년 기준 1천명당 27명으로, 전년의 29명보다 소폭 줄었으나 한국(1천명당 4명), 중국(1천명당 13명) 등과 비교하면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
- 북한 휴대전화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10명에 그쳤으며 인터넷 보급률은 0%였으며 세계 평균은 42%, 동아시아 평균은 37%인 것으로 나타남.

■ ‘춘궁기’ 북한 장마당 쌀값…안정세 속 상승전환설(4/23, 데일리NK)

- 23일 데일리NK가 밝힌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평양, 신의주, 혜산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은 각각 1kg당 5천원, 5천원, 4천원으로 지난 1~2월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장마당의 쌀값은 평양과 신의주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소폭 변동만 있을 뿐 크게 오르는 일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혜산은 지난해 12월 5천500원까지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매체는 전함.

- 북한 소식통들은 쌀값 안정세와 관련, 북한 당국이 주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근량미를 풀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라. 대외 경제관계

- 중국, 올 들어 북한경제 압박 서서히 완화(4/21, 아사히 신문)
 - 중국이 올해 들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서서히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함.
 - 아사히의 취재에 응한 중국 지린(吉林)성의 대북 무역회사 간부는 올해 1~3월 옥수수 등 중국산 곡물의 대북 수출량이 지난해 1년 간의 대북 수출 물량의 3배 가까이에 달했으며 중국이 작년 10월 수입 무연탄에 3%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매달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급감했던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 물량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말함.
 - 신문은 중국은 대북 경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로 북중 국경이 혼란해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함.
- 북한, 중국 조선족 기업인 150명 금강산으로 초청(4/21, 연합뉴스)
 - 엄광철 중국 선성(鮮星)투자그룹 사장은 "북한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활약하는 조선족 기업인 150명을 오는 5월 25일부터 6일간 열리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에 정식으로 초청했다"고 말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밝힘.
 - 그는 "이번 초청은 지난해 9월 중국 다롄시에서 열린 '조선정부 투자정책 설명회'에서 조선족 기업인들이 북한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에 고무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조선족 기업인만을 대규모로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함.
 - 이번에 초청받은 조선족 기업인 150명은 다음 달 25일 평양으로 들어가며 이튿날 원산으로 이동해 투자 지역 일대를 돌아보며 27일에는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 ‘나진-하산 프로젝트’ 2차 시범운송 안개탓 지연(4/23, 연합뉴스)
 - 러시아산 유연탄을 북한을 거쳐 가져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2차 시범운송 일정이 안개 때문에 다소 지체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이에 따라 이 화물선의 광양항 입항은 당초 예정(25일)보다 일주일 가까이 늦어진 5월1일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앞서 동서발전이 발전용 원료로 사용할 유연탄 4만7천t을 실은 화물선은 계획대로 20일 나진항을 출발, 24일 당진항 인근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먼저 입항한 다른 선박의 작업을 기다려야 해 하역작업은 25일께 진행된다고 뉴스는 밝힘.

- 북한 원유공업상, 러시아 방문…거래 다변화 주목(4/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배학 원유공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원유공업성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함.

- 러시아-북한 ‘농산물 검역 간소화’ 협력문서 서명(4/26, 프리모르스키 리포르투르)
 - 러시아와 북한이 농산물 교역을 위한 검역 분야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고 극동 지역 인터넷 통신 ‘프리모르스키 리포르투르’가 26일(현지시간) 보도함.
 -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7차 러-북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 정부 간 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방북한 러시아 검역 당국 대표와 북한 검역 당국 대표가 러시아의 검역 확인증만으로 북한 검역 기관의 별도 검사 없이 러시아 농산물을 북한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 양국 검역 당국은 앞으로 북한산 농산물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과정에서의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덧붙임.

- 과수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올해 300만여 그루 과일나무 식수 및 봄철 과일나무심기계획 117% 수행(4.21, 중앙통신)
- 北, 각지에서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4.21, 중앙통신)
- 北 중앙계량과학연구소, 석탄발열량측정설비(전자식온도계 등 100% 국산화) 개발 및 ‘탄광 등 석탄을 연료·원료로 하는 단위들의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정보화 보장’ 선전(4.22,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조선중앙TV, 시청권역 미국까지 확대(4/2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조선중앙TV는 4월 초부터 미국의 인공위성 '인텔샷 21'을 이용해 북미, 남미, 동유럽까지 시청 가능 지역을 넓혔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인공위성 '타이콤5'를 통해 아시아 지역과 서유럽에 방송 전파를 보내왔지만, 미주 지역으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유엔, 북한서 첫 사회인구통계 조사·3분기에 발표(4/22, 미국의소리)
 - 유엔이 북한에서 처음으로 경제·사회·인구·보건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통계조사를

실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유엔 산하 기관인 유엔인구기금(UNFPA)은 지난해 11월부터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북한 전역의 11개 도 1만3천250가구, 4만여명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인구·보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고 방소은 전함.
- 유엔이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조사에는 북한 중앙통계국 외에도 보건부 산하 인구센터, 김일성대학 소속 인구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했다. 조사 결과는 오는 3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 제3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4월 21일 최태복(당중앙위 비서)·김용진(내각부총리)·강하국(보건상/개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체육관에서 진행(4.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제10권(1967년 6월부터 1968년 4월까지 발표한 91건의 저작 수록) 출판(4.24, 중앙통신)
- 아시아축구연맹(AFC) A급감독 자격강습(2단계),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4.24, 중앙통신)
- 北,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소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갖가지 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심고 있다'고 보도(4.24, 중앙통신)
- 김일성 생일(4.15) 즈음 3월 28일 시작된 위원회·성·중앙기관 군중무용경연, 4월 23일 평양체육관에서 종료(4.25, 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중국, “북한 핵탄두 20개 보유…내년엔 40개로 늘어날 수도”(4/23, 연합뉴스)
 - 중국은 북한이 작년 말 기준으로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 WSJ는 중국의 최고 핵 전문가들이 최근 미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고, 이들 전문가는 특히 북한이 내년까지 보유 핵무기를 두배로 확대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중국 측이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자체 추정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중국이 북한의 보유 핵무기를 미국의 전망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공개한 것으로 북한이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지역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핵탄두를 제조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됨. 한편, 미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북한의 보유 핵탄두를 10~16개로 추정했음.

- 북한, 핵탄두 미사일 탑재 기술 부족(4/24, 연합뉴스)
 -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앤서니 웡(黃東) 마카오국제군사학회 회장은 북한의 핵탄두 제조설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 20개를 제조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보도했음.
 - 웡 회장은 “일반적으로 핵폭탄 장치화에는 5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각종 제재를 받은 북한은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며 “대부분 국가가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해야 핵폭탄 장치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북한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만 핵실험을 했다”고 설명함. 그는 북한이 내년까지 20개의 핵탄두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현재 북한에는 핵 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의문을 표시했음.

나. 미·북 관계

- 북한, 이란핵협상 교훈 못얻은듯...비핵화 진정성 보여야(4/22, 연합뉴스)
 -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란 핵협상으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일러 특사는 이날 미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북한은 최근 2년 동안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하며 핵-경제 병진정책을 통해 오히려 핵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음.
 - 또한 그는 “이란 핵협상의 진전은 미국이 오랫동안 대치해 온 국가와도 기꺼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쿠바와 미얀마에 이어 이란 핵협상에서 북한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미국의 유연성과 창조성, 협상 의지”라고 역설하며 “북한도 이란 핵협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 한미 국방협의회 비난...“북침 핵공격 기도”(4/23, 연합뉴스)
 - 북한은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회(KIDD) 회의 내용을 ‘북침 핵선제 공격 기도’라고 비난하며 무력대응을 다짐했음. 북한의 ‘북침 핵전쟁연습 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KIDD 회의의 결과물에 대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흉악한 기도”라고 주장했다.
 -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KIDD를 개최하고 탐지, 방어, 교란, 파괴의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으로 발전하고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한미 억제 전략위원회(DSC)’를 출범하기로 했음.
 - 북한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것이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하려는 의도라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주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도발자·교란자는 바로 미국과 괴뢰패당”이라고 비난하였음.

- 러셀 미국 차관보, “북한 핵보유국 인정 못한다”(4/24,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러셀 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미국 우방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러셀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 등 핵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됨.

다. 중·북 관계

- 북한,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AIIB 관심 표명(4/20,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와 관련, 중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짐.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20일 “북한이 AIIB와 관련해 중국에 가입절차 등을 문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중국 측 거부로 북한의 AIIB 가입이 무산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임.
 - 영국 인터넷 경제매체인 이머징마켓은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지난 2월 특사를 보내 진리퀸(金立群) AIIB 임시사무국 사무국장에게 AIIB 가입 의사를 전달했지만, 가입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음. 또한,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로 가입한 점이 주목된다고 “자금수혜를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중국, 올 들어 북한경제 압박 서서히 완화(4/21, 연합뉴스)
 - 중국이 올해 들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서서히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음.
 -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응한 중국 지린(吉林)성의 대북 무역회사 간부는 올해 1~3월 옥수수 등 중국산 곡물의 대북 수출량이 지난해 1년간의 대북 수출

물량의 3배 가까이에 달했다고 말함. 또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원인 무연탄의 대 중국 수출액도 지난 2월, 5개월만에 작년 같은 달 수출액을 상회하였음. 중국이 작년 10월 수입 무연탄에 3%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매달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급감했던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 물량이 회복세로 돌아선 것임.

- 이에 대해 북중 무역 관계자는 “무연탄에 대한 관세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였다”고 소개한 뒤 “중국은 올해 들어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늘려 대만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음. 2013년 12월 ‘친중파’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정치·경제 양면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길들이려는 모습을 보였던 중국이 경제면에서 압박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의 대북 접근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 중국, ‘러시아 무대’ 북중정상회담 가능성에 부정적(4/23, 연합뉴스)

- 중국이 내달 9일 제2차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러시아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에 다소 부정적인 속내를 비쳤음.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이 내달 9일 러시아를 방문하는데 북중 지도자가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조(중북)는 우호적인 이웃이며 우리는 중조관계 발전을 중시한다”면서 “양국 정상회담은 양측의 편리한 시기를 봐야 한다”고 답했음. 그의 이런 답변은 북중 간에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양측 간에 ‘물밑작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실현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달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북 관계는 기초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와 개별적인 일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며 받을 수도 없다”면서 “정상회담은 양측의 편리한 시기를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시진핑 주석, 반동회의서 의미있는 접촉 없었던 듯(4/23,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최고위급 지도자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다자회의에 함께 참석했지만, 양측의 의미 있는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9~24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AA) 정상회의(일명 반동회의)에 참석했음.

- 시 주석은 2013년 5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베이징을 찾은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만난 적이 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 위원장을 만난 적은 없음.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공식, 비공식 접촉을 할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반동회의의 성격을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든 접촉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음.
-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남은 김 제1위원장의 방중이나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지만 일단 중국 외교부 발표나 중국 관영매체 보도 중에서는 두 인물이 접촉했다는 보도는 25일 현재까지 전혀 찾아볼 수 없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한 러시아 대사, “김정은 아마 올 것…개성공단 참여 준비돼”(4/23, 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 “아마 갈 것(모스크바로 올 것)”이라고 밝혔음.
 - 티모닌 대사는 이날 서울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참석은 외교적 통로를 통해 확인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함.
 - 또한, 티모닌 대사는 “러시아는 개성공단에 적극적 참여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개성공단 참여와 관련한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러시아 고려인 출신 기업인들이 제안한 것이고 식품생산 관련"이라고 설명 하였으며 "지금 합의가 이뤄지면 물론 공개될 것"이라면서 모종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음.

■ 북한, 러시아 대학에 김정은 저서 등 기증(4/23, 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러시아 대학에 책을 기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 도서들이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국립사범종합대와 극동연방종합대학 나호드카 분교에 기증됐다"며 14~15일 기증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 한편, 앞서 김 제1위원장이 러시아에 제2차 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가운데 최근 크렘린 고위 인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미 전문가, "북한, 원유공급선 러시아로 전환 가능성"(4/24, 연합뉴스)

-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케빈 스탈러 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부터 동해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 사이를 오가는 북한 유조선의 활동 증가가 관측되고 있다며 북한이 주요 원유 공급원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였음.
- 스탈러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과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전제함. 그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천연가스관 건설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전한 뒤 '올해 안에 육로와 해상으로 러시아산 원유 50만이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지난달 보도 역시 북한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눈에 띈다고 지적함.
- 특히 50만이라는 양이 중국에서 매년 북한에 제공해 왔던 원유의 양과 일치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스탈러 연구원은 설명하였음.

■ 북한 원유공업상, 러시아 방문...거래 다변화 주목(4/25,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배학 원유공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원유공업성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했다.

- 이는 지난 2011년 9월 김희영 당시 원유공업상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의 방문 이후 4년 만의 방러임. 원유 수입의 약 80%를 중국에 의존해온 북한은 수입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와 이란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작년 한해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품목 중 원유 비중이 전체 수입품목의 41.7% (3천398만 달러)로 가장 컸음.
- 이와 관련해 미국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전날 “지난해 8월부터 동해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 사이를 오가는 북한 유조선의 활동 증가가 관측되고 있다”며 북한이 주요 원유 공급원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음.

바. 기타

- 미국 구호단체, 북한에 식료품과 의약품 지원(4/23, 연합뉴스)
 - 미국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난 7일 북한에 두 컨테이너 분량의 고기, 통조림 등 식료품과 의약품, 담요를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전했다.
 - 오는 6월 북한에 도착하는 이들 지원품은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에 보내질 예정으로, 이 단체는 지난 2월 말 황해남북도의 병원 두 곳에 태양열 패널과 물 저장탱크, 파이프 등 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보낸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북한에 지원품을 보냄.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병원과 요양원 등 북한의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단체 관계자는 지원 물품과 분배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조태용 외교차관, “한미간 사드 협의 없다”(4/22, 연합뉴스)
 -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22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간에 협의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 조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 중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태평양사령관은 ‘위(We)’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 내부에서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조 차관은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16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는 꿈이 아닌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잠정적으로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해 “안보 사안은 우리나라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국방장관의 정확한 판단과 국익을 생각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리퍼트 대사, “한미원자력협정, 호혜적·상호 주권존중”(4/22, 연합뉴스)
 -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협정에 가서명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협정은 한미간의 깊은 파트너십과 강력한 동맹에 어울리는 것”이라면서 “신협정은 미국이 이제까지 협상해왔던 가장 정교하고 역동적인 평화적 핵협정 가운데 하나”고 강조했다.
 - 리퍼트 대사는 “한미는 반세기 이상 평화로운 핵 협력에서 강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평화적 핵이용에서 주도적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신협정은 양국 간 정치, 경제, 무역, 에너지, 과학 등에서의 관계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양국 정부로 하여금 평화적 핵협력을 지속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한미국대사관도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정은 한미동맹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아태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미국, 비확산 '원칙' 지키며 동맹 '배려'(4/23, 연합뉴스)
 - 4년 반 넘게 끌어온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대해 미국 조야는 대체로 “양국 모두 ‘윈-윈(win-win)’이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미국 으로서는 농축과 재처리를 불허한다는 ‘비확산 원칙’을 지켜내면서도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도 적절히 배려하며 추후 여지를 열어놓는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중론임.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2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수십 년간에 걸친 한·미 양국의 민간 원자력협력 관계를 반영하는 독특하고 호혜적인 협상”이라며 “양국이 미래에 긍정적인 원자력협력을 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으며, 차 석좌는 최대 쟁점이었던 농축·재처리 허용문제에 대해 “농축·재처리를 허용한 게 아니라 고위급 협의체에 차후 논의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한 문제를 피해나갔다”며 “한국에 특정한 기술능력에 대한 주권을 영원히 포기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비확산 위기에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협정은 현 시점에서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선진화된 민간 원자력 분야를 인정하고 한미 원자력협력을 심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한미원자력협정 이행 후속작업 착수(4/24, 연합뉴스)
 - 외교부는 24일 이틀 전 가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의 정식서명에 앞서 이행에 필요한 후속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외교부는 우선 원자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규율할 별도의 규정 마련을 준비 중이며, 협정 이행을 규율할 세부 규정에는 예를 들어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물품 등을 재이전할 수 있는 제3국의 리스트 명기 등 구체적 사항이 망라될 것으로 보임.
 - 외교부는 또 협정을 이행할 별도 조직으로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원자력비확산국(가칭)’ 신설을 검토 중임. 원자력비확산국이 만들어지면 한미가 협정 에서 신설키로 한 고위급위원회(차관급)의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재 국제기구국 소속인 군축비확산과도 ‘원자력비확산국’에 통합될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29개 원전협정 가운데 국회 비준을 거친 협정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 내부적으로는 한미원자력협정 역시 국회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음. 그러나 국회 보고 과정에서 협정 비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음.
- 워싱턴 한미중 시민단체, “아베 위안부 사죄하라” 연대압박(4/24,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및 사상 첫 미 의회 합동연설을 앞두고 워싱턴 DC의 한국·미국·중국·대만 시민사회단체가 23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의 공개 사죄를 연대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특히 아베 총리의 방미에 맞춰 오는 28~29일 미 의사당 앞에서 7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고 아베 총리의 위안부 범죄 반성 및 사죄를 요구하기로 함.
 - 이들은 워싱턴 정신대대책위원회(회장: 이정실) 주최로 이날 낮 미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 및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아베 총리가 오는 29일 미 의회 연설에서 반드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실 회장과 워싱턴한인연합회 임소정 회장, 국제사면위원회(AI) 워싱턴지부의 티 쿠마 국제옹호국장, 데니스 핼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 아태지역 2차 세계대전 만행 희생자 추모회 제프리 천 회장, 대만참전용사 워싱턴협회 스탠 차이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개발협력 정책대화··미세먼지 대처 논의(4/21,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정부 간 제2차 개발협력 정책대화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밝힘.
 -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장샤오강 중국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개발이슈와 양국의 개발협력 정책 동향 등이 논의됨.

- 특히 우리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중국에 황사·미세 먼지 문제 대처를 위한 장비·기술 등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짐.

다. 한·일 관계

- 아베 총리, “과거 담화 내용 다시 쓸 필요 없어”(4/21,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는 8월께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포함하지 않을 뜻을 시사했음.
 - 아베 총리는 20일 BS 후지 방송에 출연,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 ‘사죄’ 등의 표현을 담을지에 대해 “(과거 담화와) 같은 것이면 담화를 낼 필요가 없다”며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한 이상 다시 한번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음.
 - 아베 담화와 관련해 쟁점이 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1995년 전후 50주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 전후 60주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단어로 꼽힘. 아베총리는 이어 “내 생각이 어떻게 전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과거의 담화를) 카피(복사)할 것 같으면 (담화의) 이름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밝힌 뒤 “앞선 대전(2차대전)에 대한 반성과 전후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 지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결의, 100년 후의 일본과 세계의 존재 방식 등을 얘기하고 싶다”고 덧붙임.
- 방미 앞둔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대신 공물만 봉납(4/21,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1일 시작된 야스쿠니(靖國)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내각 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마사카키’(眞신 <木+神>)로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제2차 정권 발족 후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으며 춘계·추계 예대제 때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했음.
 - 아베 총리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춘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하였음. 이는 한국과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26일부터의 미국 방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됨.

- 반등서 기대 저버린 데이비드 총리…한일관계 더욱 불투명(4/22, 연합뉴스)
 -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이는 주목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반등회의 기조연설이 우리로서는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쳤기 때문임.
 - 아베 총리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등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반등회의) 기조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반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 ‘사죄’ 등의 언급은 하지 않았음. 잇따른 국제무대에서의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라”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메시지 발신에도 사죄와 반성을 담은 과거 무라야마 담화나 고이즈미 담화와는 거리를 둔 셈임.
 - 아베 총리의 반등회의 기조연설은 오는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과 8월께로 예상되는 종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로 인식되었음. 아베 총리가 반등회의에서 첫 스텝을 잘못 밟으면서 미 의회연설과 아베담화에 대한 기대도 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유홍수 주일대사, “식민지배·침략·반성 표명이 일본에 득”(4/22, 연합뉴스)
 - 유홍수 주일대사는 22일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 문구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에 포함하는 것이 “일본에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유 대사는 이날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무라야마 담화에 들어간) 식민지배, 침략, 반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담화(아베 담화)에 들어갈지 말지에 따라 담화가 어떻게 보일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 일본어로 강연한 유 대사는 아베 담화의 ‘청중’에 한국 국민도 포함된다고 강조한 뒤 “한국, 중국 국민에게 이 정권(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에 조금 의문이 있다”며 “그런 의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핵심 단어'를 쓴다면 주변국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朴대통령, “日, 과거사 문제에 진정성있는 행동보여야”(4/24, 연합뉴스)**
 - 중남미 4개국 순방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초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현지 일간지인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개헌 움직임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우려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지키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가 빠진 전후 70년 담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다 29일(미국 현지시간) 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3·1운동 뒤 일본 경찰이 성고문”…미 교회연합회 문서 발견(4/26, 연합뉴스)**
 - 3·1운동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 경찰들이 당시 한국(조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고문까지 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미국 교회연합회의 문서가 발견되었음. 이는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비롯한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거부하는 가운데, 일제 시대에 일본 경찰이 조직적으로 여성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확인된 것임.
 -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한인교회 창고에서 최근 발견된 ‘한국의 상황(The Korean Situation)’이라는 제목의 27페이지짜리 문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국인들이 벌인 독립운동을 소개하고 일본의 무자비한 진압 상황을 폭로하고 있음.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1920년 6월께로 알려졌다.
 - 미국 선교사들의 입을 빌려 미국 교회연합회가 작성한 이 문서는 한국인의 주장이 아니라 외국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짐. 또 일본의 갖은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학생들까지 독립운동에 나섰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기술돼 있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했다'는 일본 측 주장도 터무니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아베 미의회 연설 안돼” 한인사회 반대캠페인 막판 총력(4/26, 연합뉴스)
 - 미주 한인 동포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앞두고 아베의 역사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막판 총력을 쏟고 있음.
 - 시카고에 기반을 둔 한인 유권자 권리옹호단체 'KAVOICE'를 비롯한 미주 한인 단체들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반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음.
 - 미주 한인 동포들은 지난 2월부터 뉴저지 주에 기반을 둔 ‘재미 한인 포럼’ 웹사이트(kafus.org)를 통해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 반대하는 청원 서명 운동을 벌여왔음. 이들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전세계에 일본이 미국의 주요 우방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라면서 “아베 총리와 일본 극우 세력에게 면죄부 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음.

라. 한·러 관계

- ‘나진-하산 프로젝트’ 2차 시범운송 안개탑 지연(4/23, 연합뉴스)
 - 러시아산 유연탄을 북한을 거쳐 가져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2차 시범운송 일정이 안개 때문에 다소 지체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현지의 안개 때문에 포스코가 사용할 유연탄 4만t을 실은 화물선의 북한 나진항 입항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따라 이 화물선의 광양항 입항은 당초 예정(25일)보다 일주일 가까이 늦어진 5월1일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 앞서 동서발전이 발전용 원료로 사용할 유연탄 4만7천t을 실은 화물선은 계획대로 20일 나진항을 출발, 24일 당진항 인근에 도착할 것으로 봄. 다만 먼저 입항한 다른 선박의 작업을 기다려야 해 하역작업은 25일께 진행될

예정임.

마. 미·중 관계

- 심기불편 중국 “미-필리핀 훈련, 우릴 위협하려는 것”(4/21,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과 필리핀이 전날 남중국해에 있는 황옌다오(黃巖島)에서 불과 220km 떨어진 지점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으며 참여 병력도 1만명을 넘어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고 지적했음.
 -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2012년에는 황옌다오(스카버러 섬)를 점거해 실효지배하고 있음. 필리핀 정부는 국제해양 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국제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임.
 -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텅젠췌 연구원은 “훈련 참여병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확실히 놀랄만한 일”이라면서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각자 도모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또한, 텅젠췌은 참여 병력이 배가된 것은 미국의 아시아 재배치 전략을 위한 의도로 보이며 필리핀은 미국의 후원을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음.
- 미·중, 광둥앞바다 합동군사훈련…“우발충돌 방지 목적”(4/26,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광둥(廣東)성 잔장(湛江)시 앞바다에서 해군 함정을 동원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미국 제7함대 지휘함인 블루릿지함과 중국 남해함대 징강산(井岡山)호는 잔장항 인근 해상에서 이날 오전부터 통신, 해상편대 운용, 합동 구조 등을 골자로 한 군사훈련에 들어갔음.
 - 양국 해군은 이날 오전 돌발적인 해상 조우를 가정한 상황에서 통신 훈련을 벌인 데 이어 편대 전환 및 감속 등의 훈련을 벌였고, 이날 오후에는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공동 구조 훈련도 시행함. 이번 훈련은 화재가 난 모의 선박을 동원, 공동으로 진화에 나서고 헬리콥터를 띄워 조난자들을 구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와 관련, 미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의 베이징(北京) 정상회담에서 양국 함정과 전투기의 해상 조우시

행동수칙 마련에 합의한 바 있음. 이번 훈련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간의 영유권 분쟁을 빚는 남중국해 상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미·중간 우발적인 군사 충돌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음.

바. 미·일 관계

- 주미 일본대사, 아베 총리 ‘역대담화 전체 계승’ 이미 입장 표명(4/22, 연합뉴스)
 -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주미 일본 대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미 무라야마·고노담화 등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을 전체로서 계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이것은 매우 강력한 입장 표명”이라고 밝혔다.
 - 사사에 대사는 오는 26일 아베 총리의 공식 방미를 앞두고 이날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전체로서 역대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아베 총리가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내용을 과거사 발언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주목됨. 아베 총리는 지난 1월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으나, ‘전체로서’라는 언급은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피해 나가기 위한 모호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음.
- 케리 미 국무, 보스턴 자택으로 아베 총리 초청(4/22, 연합뉴스)
 -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케리 장관의 고향인 보스턴 자택에서 회동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통신은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케리 장관이 26일부터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아베 총리를 보스턴 자택으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스턴 만찬에는 아베 총리의 방미 일정을 수행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참석할 예정임.
 - 케리 장관이 수도 워싱턴DC가 아닌 자신의 고향 보스턴으로 아베 총리를 초청한

것은 개인적 친밀도를 높여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을 풀려는 이벤트로 풀이됨.

- 美하원의원들, 아베 연설할 장소서 “과거사 사과하라” 직격탄(4/22, 연합뉴스)
 -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오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음.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찰스 랭글(민주·뉴욕)·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빌 파스 크렐(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은 미국 하원 본회의장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아베 총리는 이번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밝혔음.
 - 의원들의 이날 연설은 일주일 뒤 아베 총리가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하원 본회의장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지난 2007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7) 할머니가 직접 참관한 가운데 이뤄져 더욱 주목을 받았음.
 - 연설을 한 의원들은 모두 친한파이지만 미·일 안보·경제협력과 별개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한 미국 의회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특히 미국 언론에 이어 의회까지 나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명시적 반성과 사과를 촉구함에 따라 아베 총리로서는 29일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두고 커다란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임.
- 美의원, “군대위안부 문제는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요”(4/23, 연합뉴스)
 - 세일라 잭슨 리(텍사스) 하원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슈”라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여성·인권운동가 출신으로 11선인 리 의원은 21일(이하 현지시간)자 의사록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과거는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연속체로서, 과거를 잘못 다룬다면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나가는 게 훨씬 힘들다”고 밝힘.
 - 리 의원은 특히 “국제사회의 힘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에 강해질 수 있다”며 “과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불분명하게 한다면 그 힘은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에 의해 강요된 위안부 시스템은 그 잔인성과 규모 면에서 21세기 여성 인신매매의 대표적 사례의 하나”라며 “과거 한국여성들을 상대로 가해졌던 일체의 잔혹 행위에는 불구와

죽음, 궁극적인 자살로 이어진 집단 성폭행과 강요된 낙태, 모욕, 성폭력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음.

- 아베 총리, 미 의회 연설때 일본군 성노예 명백히 사죄해야(4/23, 연합뉴스)
 -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데니스 헬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명백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헬핀 연구원은 이날 아베 총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동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 ‘사죄’를 언급하지 않은데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대해 전날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에 기고한 자신의 글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힘.
 - 헬핀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위안부를 ‘강요된 성노예’로 표현한 것을 언급하면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공식 인정과 사과, 책임 수용을 촉구한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로 그 현장에서 자신이 연설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아베 총리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위안부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라고 한 것을 두고 돌파구라고 언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 단어는 ‘희생자가 누군가에 의해 납치됐다’는 의미로 호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미국, 아베 총리 반동회의 연설에 “언급 않겠다”(4/23,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반동회의 연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음.
 -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동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음.
 - 하프 대변인 대행의 이 같은 언급 자체는 아베 총리의 반동회의 연설에 대한 한국 등 주변국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특히 미 의회 일각은 물론 전문가 그룹과 주류 언론에서 연일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공개로 비판하면서

그가 오는 29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됨.

- 미국에 공들이는 아베…방미때 미군포로 출신 만찬 초대(4/23,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전쟁 중 일본군에게 포로로 붙잡혔던 퇴역 미군을 이달 말 미국 방문 때 예정된 만찬에 초대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달 29일 워싱턴에서 열 예정인 만찬에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 루손섬 바탄 반도를 공격한 일본군에게 붙잡혔다가 살아남은 미군 포로로 구성된 단체의 대표인 레스터 테니(95) 아리조나 주립대 명예교수를 초대하였음.
 - 테니 명예교수는 전쟁 당시 일본군이 바탄 반도에서 붙잡은 미군과 필리핀군 포로 등 수만 명을 폭염 속에서 약 100km가량 걷도록 강요해 많은 사망자를 낸 이른바 ‘바탄 죽음의 행진’을 겪었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낸 인물로, 그는 포로생활 중 강제 노역을 배상하라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고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도쿄를 방문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현 민주당 대표) 당시 외무상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음.
 - 아베 총리가 테니 명예교수를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전쟁 중 일본군이 미국에 저지른 잔학행위에 관해 유감 또는 사과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아베 총리, 방미기간 홀로코스트박물관 방문 검토(4/23,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방미 기간에 알링턴 국립묘지, 홀로코스트(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박물관,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등 전쟁 관련 시설들을 잇달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아베 총리는 이들 시설을 방문해 ‘부전(不戰)의 결의’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이 같은 일정 조율은 ‘아베 총리는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음.
 - 또 여름에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될

전망임.

- 일본 기업들, 미군 전쟁포로 강제노역 인정해야(4/24, 연합뉴스)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국주의 일본군에 붙잡힌 미군을 강제노역으로 내몰았던 일본 기업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와 의회 합동연설을 계기로 이 사실을 정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미 상이군인회(DAV)가 요구했음.
 - DAV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2차 대전 때 미군 포로의 노예 노동으로 이익을 본 일본 기업들, 특히 지금도 미국에서 영업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 점을 인정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기록 보존과 교육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음. 이 단체는 또 일본 정부에도 2009년 미국인 전쟁포로들에게 했던 사과 내용을 영어와 일본어로 작성된 공식 문서로 만들어 발표하라고 요구함.
 - 2차대전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은 약 2만7천 명이고 그중 약 40%가 포로 생활 도중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미국 민주·공화 의원 25명, “아베, 과거사 사과하라” 연판장(4/24, 연합뉴스)
 - 미국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25명이 23일(이하 현지시간) 연판장을 돌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음.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25명은 이날 “아베 총리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공식으로 재확인하고 인정하라”는 취지의 연명서한을 작성,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에게 보냈음.
 - 이 같은 초당파적 집단행동은 26일 아베 총리의 공식 방미를 이틀 앞두고 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과장이 예상됨. 특히 오는 29일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서는 아베 총리로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보다 명확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야 하는 압박감을 크게 느낄 것으로 보임.
 - 서명에 참여한 의원 25명은 민주당 소속 17명과 공화당 소속 8명으로, 민주당에서는 혼다 의원과 스티브 이스라엘(뉴욕), 그레이스 멩(뉴욕), 찰스 랭글(뉴욕), 제럴드 코널리(버지니아), 세일라 잭슨 리(텍사스), 엘리스 헤스팅스(플로리다), 로레타 산체스(캘리포니아), 알비오 시레스(뉴저지), 애덤 쉬프(캘리포

니아), 빌 파스크렐(뉴저지), 앨런 로웬살(캘리포니아), 주디 추 (캘리포니아), 린다 산체스 (캘리포니아), 데니 핵(워싱턴), 도널드 베이어 (버지니아), 에마뉴엘 클리버 (미주리) 의원이 참여함. 공화당에서는 로이스 위원장과 피터 로스컴 (일리노이), 마이크 켈리(펜실베이니아), 크리스토퍼 김슨 (뉴욕), 블레이크 패런 톨드(텍사스), 바버라 캄스탁(버지니아), 톰 리드(뉴욕), 롭 우달(조지아) 의원이 서명하였음.

- 방미 아베 총리, 동맹격상 앞세워 역사인식 돌파 노린다(4/24, 연합뉴스)
 -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4월26일~5월2일)은 일본 입장에서 미일동맹 격상, 역사인식 문제 돌파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임.
 - 아베 방미기간인 27일 양국이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어 합의하는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미일 군사동맹의 격상을 의미하며, 새 가이드라인에는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미군과 자위대 간 상시 협의체 창설, 무력충돌 사태(유사시)와 평시의 중간단계인 ‘회색지대 사태’에서의 미일 공조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 총리는 업그레이드한 미일동맹을 방패삼아 한국과 중국의 역사인식 공세를 돌파하려는 의중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본 총리로는 처음 미국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29일) 기회를 따낸 아베는 연설 때 1941년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한 대미 전쟁에 대해 분명히 반성하되, 1931년 만주사변을 필두로 한 대 중국 침략과 한국 식민지배 등에 대한 반성은 모호성의 영역에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
- 백악관, “아베 총리 방문 때 TPP협상 타결 발표 없을 것”(4/25,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다음 주 정상 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럴라인 애킨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은 기자들과 전화회견을 통해 이번에 “최종 합의 발표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애킨슨 부보좌관은 “양국 정상은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함께 할지 논의할 기회는

언을 것”이라고 덧붙임. 백악관 관리들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미국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보호장벽 등을 둘러싸고 아직 좁혀야 할 이견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분위기를 전함.

- 백악관, “한일, 군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추구해야”(4/25, 연합뉴스)
 - 백악관이 한·일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 해결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에반 메테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6일부터 시작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에 앞서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콘퍼런스 콜(전화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건설적이며 솔직한 방법으로 치유를 촉진할 뿐 아니라 최종 해결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고 밝힘.
 - 메테이로스 보좌관은 “우리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에서 협의와 외교를 계속하고 있으며 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음. 이는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차례에 걸쳐 진행해온 국장급 협의를 거론한 것으로서,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하는 미국 측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됨.
- 아베 총리에 파격 예우…오바마 ‘과거사’보다 ‘실리’(4/25, 연합뉴스)
 - 2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은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미·일간의 신(新) 밀월관계를 상징하고 있음. 외견상의 방미 형태는 ‘공식방문(official visit)’이지만 ‘국빈방문(state visit)’과 동일한 수준의 파격적 예우가 준비돼 있음.
 - 무엇보다도 보스턴-워싱턴DC-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로 이어지는 8일간의 방미 기간 자체가 이례적임. 통상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정상들의 체류 기간은 대체로 4~5일에 그치고 있음. 1997년 10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9일간 국빈 방문한 것이 외국 정상으로서는 가장 길었고, 의전 면에서도 ▲공항영접 행사(Arrival Ceremony) ▲백악관 공식만찬(State Dinner)이라는 국빈방문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음.
 - 28일 백악관 환영행사도 외국 정상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꾸며지는데,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외국정상을 위한 백악관

공식 만찬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방문을 포함해 모두 7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내심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과거사’보다 안보·경제협력이라는 ‘실리’를 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게 워싱턴DC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임.

■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 미국, 노골적인 러브콜(4/26, 연합뉴스)

- 2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일본을 향한 미국의 러브콜이 노골적임. 초청 대상국가에 대한 관용적인 외교적 수사의 차원을 넘어 미·일동맹의 질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듯하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임. 단순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의 동맹’을 넘어 서로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공동운명체’ 관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옴.
- 24일 오후 아베 총리의 방미 일정과 의제를 소개하는 백악관의 사전 브리핑은 신(新) 밀월관계를 구가하는 미·일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줬음. 아베 총리의 방문을 “역사적 방문”이라고 규정한 메데이로스 보좌관은 “과거의 적이었던 두 나라가 화해를 이뤘고 이를 토대로 종전 70주년에 이른 지금 지역과 세계에서 함께 협력하는 매우 가까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총평함.
- 특히 주목할 대목은 백악관이 아베 총리의 방미를 베타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어젠다인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화룡점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임. 중동 쪽에 집중된 외교·안보자산을 아시아로 끌어오려는 이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미국 주도의 역내 패권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압축됨. 일본은 바로 이 같은 전략을 구현할 미국의 ‘역내 대리자’라는 인식이 워싱턴에 확고히 구축돼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임.

사. 미·러 관계

■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 방공망 구축” 비난(4/23, 연합뉴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영국 BBC방송,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전력을 강화한 우크라이나 반군의 배후로 러시아를 공개

지목했음.

-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작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러시아 방공 무기가 관측됐다”며 “훈련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볼 때 러시아의 개입이 확실하다”고 강조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반군이 금지 지역에 중화기를 배치해 지난 2월 체결된 휴전협정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음. 우크라이나 정부도 러시아가 반군을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러시아 부대까지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날 미국 국무부의 성명에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음.

■ 러시아 해커 펜타곤도 침투…北 사이버전 능력 미흡(4/24,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 백악관뿐만 아니라 국방부(펜타곤)도 침입한 것을 밝혔다고 AP와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함.
- 미 국방부는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의 사이버전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사이버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첨단 IT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음. 카터 장관은 강연에서 “올해 초 국방부의 공개 네트워크에 러시아 해커가 접근한 사실이 감지돼 즉각 대응팀을 투입해서 24시간 안에 쫓아냈다”고 밝혔음.
- 한편, 앞서 지난해 10월 백악관 시스템에 포착된 사이버 침입 시도의 배후 역시 러시아 해커들로 지목된 바 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011년 수립한 사이버보안 전략을 대폭 강화한 2차 전략을 만들어 24일 공개키로 했음.

아. 중·일 관계

■ 중국, 일본 야스쿠니 집단참배에 “결연히 반대”(4/22,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靖國)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집단으로 참배한 데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반발했음.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중국은 일본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힘. 또한

“제2차대전 종전 70주년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맞아 일본 정치인들은 정확한 역사관을 견지하고 아시아 이웃국가와의 화해와 상호신뢰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날 반동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연설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침략의 역사 직시와 반성을 강조함. “국제사회는 보편적으로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함으로써 아시아 이웃국가와의 화해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 측이 이같은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중일 정상, 관계개선 의지…시진핑, 역사직시 촉구(4/22,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열어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현안을 논의했음.
- 시 주석은 그러나 아베 총리에게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차 강조해 역사인식 문제가 양국간 여전한 걸림돌임을 보여줬음. 시 주석과 아베 총리는 이날 반동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시간 오후 7시계부터 30분 남짓 회담했음. 두 정상의 양자 회담은 이번이 두번째이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여 만임.
- 시 주석은 회담 시작 부분에서 “작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의 (중일 정상간) 회담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며 “중일 양국 국민의 공동 노력으로 어느 정도, 중일 관계는 개선됐다”고 말했음.

■ **중국 전문가, “시진핑-아베 회담, 긴장완화 신호”(4/23, 연합뉴스)**

- 22일 반동회의에서 성사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일단 ‘긴장완화 신호’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음.
-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홍(時殷弘) 인민대학 교수는 23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만남은 중일대립이 완화됐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음.
- 2012년 9월 일본이 중일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를 국유화하면서 급격히 냉각된 중일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임. 중국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앞으로 중일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日정부, “중일 정상회담 의미있었다…관계개선 의사 확인”(4/2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일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에 양자의 의견이 일치했고 앞으로 여러 수준의 대화와 교류를 반복해 관계 개선의 흐름을 확실하게 하자는 양쪽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말했음.
 - 그는 시 주석이 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지니길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 전후 70년 담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아베 총리는 기존의 담화를 계승할 것이라는 뜻을 그 자리에서 표명했고 담화의 내용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음.
- 중일정상회담 끝나자마자 日각료 줄줄이 야스쿠니참배(4/23,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하루 만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각료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잇따라 참배했음. 이에 중국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라”고 촉구함.
 -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장,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여성활약담당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이 각각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음. 춘계·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나 일본 폐전일(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반복해 온 이들 여성 각료 3명은 21일 예대제가 시작됐는데도 참배하지 않고 있다가 제사 마지막 날인 23일 전격 참배했음.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하루 만으로, 정상회담 다음 날 각료가 기다렸다는 듯이 참배를 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음.

- 일본, '전쟁 반성' 아베 연설문 중국에 미리 전달(4/24,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데 대해 깊은 반성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반동회의 연설문을 중국 측에 미리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옴.
 - 일본 내 중문 온라인 매체인 일본신문망(日本新聞網)은 일본 정부가 반동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아베 총리의 연설문 초안을 중국 측에 미리 보냈다고 익명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온라인판이 23일 (현지시간) 전했다.
 - 일본신문은 청용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가 지난 21일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기도 했다고 보도했음.

자. 중·러 관계

- 중·러 주도 상하이협력기구 키르기스서 합동훈련(4/22, 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이 21일 (현지시간)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SCO 합동군사훈련은 키르기스스탄 북부 도시 토크목의 군사기지에서 나흘 동안 펼쳐질 예정이다.
 -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러시아 중부군관구 공보실은 “러시아, 중국,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특수부대원들이 키르기스 삼시 계곡에서 가상 무장 세력을 고립시켜 섬멸하는 훈련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 병력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았음.
 -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SCO는 2개국 외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회원이며 이란,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음. SCO 회원국들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대(對)테러 명목의 합동훈련을 벌여오고 있으며, 지난해 훈련은 8월 말 중국 내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주무허(朱日和) 훈련기지에서 약 7천명의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실시되었음.

차. 일·러 관계

- 아베 총리, 내달 러시아 전승기념식 불참 방침(4/24,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통신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아베 총리의 기념식 참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대립하는 미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서방 주요국 지도자들도 이미 행사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로선 승전행사를 건너뛰는 수밖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밝혔다.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혁명적 신념 버리지 말자"…내부 결속 다지기(4/22,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을 계기로 '혁명적 신념'을 완곡하게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끄.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정론 '백두산으로 오르자'에서 지난 18일 새벽 김 제1위원장이 백두산에 오른 사실을 언급하며 그의 집권 3년을 '백두의 행군길'로 표현했음.
 - 그러면서 "탁월한 선군영장,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창조의 거장"으로 대표되는 김 제1위원장의 통치 근저에는 "백두산악과도 같은 혁명적 신념이 있다"고 역설했음.
 - 국제사회의 제재와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3대 세습체제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김 제1위원장의 신념과 집념을 강조한 셈임.
 - 신문은 그러면서 신세대를 비롯한 전 주민이 김 제1위원장을 믿고 따르는 혁명적 신념을 간직할 것을 거듭 촉구했음.
 - 신문은 서방의 경제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 등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거론하며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혁명의 주력이 되어야 할 새 세대들이 자기 근본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북한은 또 "가장 위험한 적은 우리 마음의 기둥으로 높이 세운 혁명신념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이라며 신세대와 주민들의 사상이완 현상을 크게 우려했음.
 - 체제 고수를 위한 투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 즉 신념과 충성심이 부족한 주민들의 의식에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임.

- 북 장마당 식량가격 갑자기 올라(4/22, 자유아시아방송)
 - 올해 들어 하락하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던 북한 장마당 식량가격이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끝으로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음.
 - 갑자기 식량가격이 오르는데 대해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이야기했음.

- 22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4월 15일 이전까지 장마당에서 kg당 4천8백원이던 쌀값이 4월 15일이 지나자 5천5백원까지 올랐다”며 “쌀값이 갑자기 오르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일부에서 중국 인민폐 대 북한 돈 환율이 오른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흑독한 식량난을 경험했던 주민들은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다만 얼마라도 쌀을 사두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음.
 -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장마당들에서 환율은 4월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인민폐 1위안 대 북한 돈 1,280원이었으나 4월 15일 지나서부터는 중국 인민폐 1위안 대 북한 돈 1,325원으로 올랐다고 그는 전했다.
 - 이와 관련 같은 날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장마당에서 전반적인 식량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국내 식량재고가 바닥이 났기 때문”이라며 “국경연선 중국지역에서 쌀값이 오른 것도 장마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북한은 3월 말까지 군인들에게 입쌀과 강냉이를 각각 5:5의 비율로 공급했는데 4월 초부터는 입쌀 30%, 강냉이 70%의 비율로 공급하고 있으며 그나마 한 사람당 하루 600그램이던 식량공급에서 50그램을 전시 절약미로 떼어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 유엔, 북한서 첫 '사회·인구 통계' 조사...4만여명 대상 실시(4/22, 미국의소리)
- 유엔 산하 기관인 '유엔인구기금'이 북한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인구보건조사'를 실시했음.
 - 유엔이 북한의 사회와 경제, 보건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앞서 유엔은 지난 1994년 북한이 자체적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했을 때, 일부 기술적인 지원을 했으며 2008년에는 북한 당국과 함께 인구주택 총조사 즉, '인구 센서스'를 실시했음.
 - 유엔인구기금 아시아 사무소의 로이 와디아 대변인은 이메일에서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 지난 2012년 말 조사 준비 과정에 착수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지도와 인구 통계 작성용 표본 틀을 마련했으며 지난해에는 설문 조사 문항을 마련하고 조사원 훈련 과정을 거쳐 11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음.

- 이번 조사는 북한 11개 도 내 1만3천여 가구 (13,250)를 대상으로 실시 됐으며 각 도에서 평균 1천250 가구가 설문 조사에 참여했는데, 한가구를 4인 가족으로 봤을때 4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임.
 -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사회상을 세분화해 심층적으로 조사한 데 있음.
 - 북한 1만 3천여 가구의 가구당 거주자 수와 주거 환경, 사망률, 결혼, 출산, 피임, 노인, 성관계 선호도 등을 조사했음.
 - 와디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 경제와 사회, 보건 등 북한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번 조사를 비롯해 오는 2018년 실시될 ‘인구주택 총 조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170만 달러에 달함.
 - 유엔인구기금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올해 3분기에 발표할 예정임.
- 세계은행 ‘북한 어린이 저체중 상황 다소 개선’(4/23, 미국의소리)
- 세계은행은 최근 북한의 인구수와 어린이 영양 실태, 삼림 황폐화 정도 등을 분석한 ‘세계개발지수 2015’ 보고서를 발표했다.
 -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5살 미만 북한 어린이가 전체의 15.2%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 같은 규모는 세계은행이 이전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힌 저체중 비율 18.8% 보다 3.6% 개선된 것임.
 -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2년과 2013년,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5살 미만 저체중 어린이 비율은 줄곧 18.8%에 달했음.
 - 하지만 북한의 저체중 어린이 비율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몽골의 저체중 어린이 비율은 각각 3.4%와 1.6%로 북한과 격차가 큼.
 - 또 북한에서 5살이 되기 전 사망하는 유아의 수는 2013년 기준 1천 명당 27명으로, 전년의 29명보다 약간 줄었지만 한국의 4명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특히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산모 수는 10만 명 당 87명으로 전년도 81명보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유엔은 지난 9일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 2015'에서 북한 5세 미만 어린이의 27.9 %가 발육부진(stunting), 4%가 체력저하(Wasting)를 겪고 있다고 밝혔음.
- 벨기에 단체, 북한 식량난 '특별감시 대상국' 지정(4/24, 연합뉴스)
 - 벨기에 비정부기구인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가 극심한 식량 위기 등을 이유로 북한을 '특별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보도했음.
 - 식량, 안보, 인권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위기 상황을 평가해온 이 단체는 "북한 주민 1천800만 명이 만성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고 240만 명이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위기에 처했다"며 이렇게 밝혔음.
 - 단체는 식량이 부족한 북한 주민의 숫자가 작년보다 200만 명이 늘었으며, 이는 전체 북한 인구의 70%가 식량 부족 상황에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특히 5살 미만 어린이 가운데 4%가 급성 영양실조 상태로 자연재해에도 취약해 식량 사정에 대한 특별한 감시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단체는 덧붙였다.
 - 이 단체는 올해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이 들어온 114개국 상황을 분석해 2개국가를 특별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으며, 북한과 함께 아프리카 동북부의 독재국가 에리트레아가 대상국으로 뽑혔음.
- 북한, 미국 인권행사 앞두고 "우리 인권문제 없어"(4/25, 연합뉴스)
 - 미국에서 대규모 북한인권 관련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북한은 25일 미국의 인권활동을 비난하며 자신들은 "인권문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하에서는 '인권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찌어빠진 인권공세로 어찌보겠다는 것은 가소롭다"고 폄하했음.
 - 이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백인 경관의 흑인 총격 사건과 이라크전 당시 미군의 포로학대 사건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야말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 인권의 불모지"라고 비난했음.
 - 나아가 미국의 대북 인권공세는 군사적 침략을 노린 것이라면서 "미국의 악랄한 인권공세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셔 버릴 것"이라고 다짐했음.

2. 북한 인권

- 인권 침해·테러지원 北, 지급할 배상금만 8000억원 이상(4/20, 헤럴드경제)
 - 최근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이들이 연이어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각종 인권침해 관련 소송으로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8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됨.
 -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식통에 따르면, 고(故) 김동식 목사 납북사망 사건으로 승소한 이스라엘 인권단체가 배상금 3억3000만달러(한화 약 3500억원)을 받고자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추진 중임.
 - 김 목사는 10여년 동안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의 인권보호 활동 및 선교 활동을 해왔으나, 2000년 북한에 납치됐고 이후 북한 감옥에서 고문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미국 연방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지난 9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김 목사 가족에게 3000만달러를 배상하고,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유족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이스라엘 인권단체 ‘슈랏 하딘’측은 미국 월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돈과 자산을 추적해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이미 미국 정부가 동결 북한 자산을 압류할 방안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 “북한인권 가해자들, 짓값 단단히 치뤄야”(4/21, 데일리NK)
 -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간부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미 국무부의 한 간부는 20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초에 발표한 북한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북한 인권 문제에도 분명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이 주인공인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미국 영화사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사건을 두고 북한 당국과 조선노동당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지난 1월 달에 발동했음.

- 당시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함께 '심각한 인권 침해'도 새로운 제재의 필요한 이유라고 명시했음.
 - 미 국무부 관계자는 행정명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의 북한제재를 강화해준다면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준비할 것임을 암시했음.
 -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지하도록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하는 한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주며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제재 대상으로는 정치범수용소나 공개처형 등에 관여한 인물과 조직이 될 것임.
 -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와 행보를 함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 남미 국가들 "북한, 핵 포기하고 인권개선 해야"(4/21, 미국의소리)
- 남미 국가 페루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역내 중대 위협으로 규정했음.
 - 이 같은 활동이 한반도와 북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임.
 - 칠레 외교부는 칠레가 유엔총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등을 통해 북한 핵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에 어긋나는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음.
 - 이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무조건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며 모든 핵 시설과 물질에 대한 사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아들인다는 게 칠레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안보리 결의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에 따른 대북 제재 역시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 칠레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평화와 지역안전은 물론 핵확산금지조약 역시 위협하고 있다며, 6자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외교 노력을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음.
 - 남미 국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반대하고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조해 왔지만, 이번처럼 북한의 위협을 적시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개 지지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임.

- 북한자유주간 26일 워싱턴서 개막(4/22, 자유아시아방송)
 - 해마다 4월 마지막주에 마련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오는 26일 시작해 5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림.
 - 이 행사에는 미국 내 60여개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를 비롯해 미국 정치인과 탈북자들이 대거 참여해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함.
 -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미국 의회에서 계류중인 북한 제재 이행법안의 통과를 추구하고 탈북자들을 위한 기금마련 행사도 펼침.
 - 행사 일정을 보면 첫날인 26일에는 한국전쟁기념관 방문 및 현화가 있겠고, 같은 날 저녁에는 탈북 피아노연주자 김철웅 씨 등이 출연하는 음악회가 열림.
 - 이튿날에는 기자회견과 함께 한미자유연맹이 마련한 토론회와 함께 북한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에 관한 보고회가 준비되어 있음.
 - 셋째날인 28일에는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그리고 29일에는 탈북자들을 위한 미국 의회 청문회도 마련됨.

- 캐나다 북한인권단체 "김정은 외국 방문 막아달라"(4/23, 연합뉴스)
 -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해 외국 방문을 막으려는 청원에 나섰다고 보도했음.
 -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는 22일 캐나다 총리실과 외교부, 의회 주요 의원실에 김 제1위원장을 기피인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음.
 - 기피인물 지정은 외교관 추방 등을 위한 절차로, 한 국가에서 기피인물로 지정된 인사는 해당 국가 입국이 전면 금지됨.
 - 북한인권협의회는 국제사회가 인권 유린 책임자이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대상인 김 제1위원장의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외교적 제재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는 다음달 전승절 행사에 김 제1위원장을 국가수반 자격으로 초청한 러시아를 비난하기도 했음.
 - 이경복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장은 "조만간 캐나다 의원 중 한 명이 뜻을 같이한다는 발표를 할 것"이라며 "기피인물 지정이 성사된다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음.

- 국제인권단체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 인권 침해"(4/23, 연합뉴스)
 - 국제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HRW는 22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당국에 넘기도록 하고 노동조합 결성도 허용하지 않는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음.
 - HRW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북한 당국이 임금 전체를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임금 일부밖에 받지 못한다고 밝혔음.
 - 이처럼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방식 때문에 최근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임금이 인상된다 해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는 의문이라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 노동규정 자체도 국제적 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방해받지 않고 조직을 결성할 권리, 대표를 선출할 권리, 독자적 노동조합을 구성해 단체 협상에 나설 권리 등이 없다는 것임.
 - 여성 노동자는 성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어린이는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HRW는 남한이 북한 당국과 임금 인상을 두고 논쟁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브라질 대통령 "평양대사관과 비핵화·北인권개선 노력"(4/25, 연합뉴스)
 -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평양에 있는 (브라질) 대사관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또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호세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서 이 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 간 논의 사항을 전달했음.
 -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북한에 모두 상주 공관을 운영하고 있음.
 - 호세프 대통령은 이어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전국대학생, 북한인권법 통과 위한 인권주간 선포(4/26, 데일리NK)
 -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가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캠페인을 개최함.
 - ‘대학생북한인권주간’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올해로 4번째로 북한인권 특강, 북한인권 사진전, 길거리 공연,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엽서보내기, 탈북 아동을 돕기 위한 기부프로그램 등이 진행됨.
 - 문동희 대표는 “이번 행사는 심각한 북한인권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며 국회에 북한인권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소개했음.
 - 이어 그는 “‘대학생북한인권주간’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하나로 모아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음.

3. 탈북자

- ‘재입북’ 위해 탈북자 정보 수집한 탈북자, 항소심서 집행유예(4/21, 미국의소리)
 - 한국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1일 한국 내 탈북자들의 동향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 46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음.
 - 김 씨는 항소심에 앞선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
 -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영사관과 전화로 접촉해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실상과 탈북 브로커들의 북한 내 연락처를 알아 보라’는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임.
 - 김 씨는 지난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경찰에 자수했음.

- 탈북 여성 인신매매 비용 두 배로(4/22, 자유아시아방송)
 -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행위가 암암리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 길림성 지방에서 탈북자 구출활동을 하고 있는 정 모 씨는 “중국 인신매매단이 북한 군인들과 짜고 여전히 어린 북한여성들을 중국으로 도강시키고 있다”고 밝혔음.
 - 정씨에 따르면 중국국경 인근에는 북한 여성들만 전문 요구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있는데, 이들은 북한 내 브로커와 결탁된 군인들에게 젊은 여성들을 골라 보내라고 요구하고 넘겨진 탈북 여성을 중국 남방이나 북방으로 팔아버린다는 것임.
 - 대량 탈북사태가 벌어졌던 2000년대 초에는 이십대 북한 여성의 경우, 1만 5천 위안(미화 3천 달러) 정도에 거래 되었지만, 최근 중국 내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매매비용도 배로 뛰었다는 것임.
 - 탈북한 여성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자신보다 열다섯 살이나 많은 중국 노총각이나 홀아비들에게 팔려간다고 정씨는 말했음.
 - 김정은 체제가 탈북자 방지를 위해 국경군인들에게 실탄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봉쇄망을 펴고 있지만, 제대를 앞둔 상급 병사나 군관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인신매매 조직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임.
 - 중국의 노총각들에게 팔려간 북한 여성들은 현재 중국 하북성과 흑룡강성 등지에 흩어져 사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 탈북여성들은 중국에서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말도 통하지 않게 되어 중국인들과 대부분 살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 한국이나 다른 자유세계로 가길 원하고 있다고 함.
 - 정씨는 “현재 하북성에 22살난 여자 한명과 흑룡강성에도 23살난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다”며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과 미국 내 민간단체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음.

- 탈북자 83% “정치범 수용소 알고 있었다”(4/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이번 조사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지원단체인 새조위, 즉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 위한 모임'과 함께 탈북자 1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음.
- 신미녀 새조위 대표는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자의 83%가 북한에 있을 때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며, 대부분 2006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40대와 50대가 절반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 특히 정치범수용소가 일반 범죄자가 수감되는 교화소나 노동 단련대 등 여타 구금시설과는 다른 형태의 시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응답자의 대부분은 정치범수용소가 어디에 있는지, 몇 군데에 있는지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감된 정치범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 답했음.
 - 다만, 남자 응답자의 72.5%, 그리고 여성 응답자의 81%는 정치범수용소는 죄없이 끌려가는 곳이라고 답해 여성이 남성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산가족

- KBS, 1983년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도록 발간(4/21, 연합뉴스)
 - 1983년 한반도를 눈물바다로 만든 KBS의 이산가족찾기 특별생방송이 기록물로 나왔음.
 - KBS는 21일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관련 기록물들을 수집해 도록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음.
 - 도록에는 방송 녹화테이프는 물론, 담당 PD의 업무 수첩과 이산가족이 직접 작성한 접수원본 등을 포함한 자료가 86종 2만 861건이 수록됐음.
 - KBS는 "해외 홍보를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했다"면서 "특히 도록에 QR코드를 삽입해 홍보 동영상과 당시 방송영상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음.
 - KBS 이산가족찾기 특별생방송은 지난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 453시간 45분 동안 진행돼 '세계 최장 시간 생방송'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됐음.
 -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는 오는 6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결정됨.

- 등재가 확정되면 이산가족찾기 기록물은 훈민정음과 난중일기 등에 이어 국내 12번째 세계기록유산이 된다고 KBS는 설명했다.

■ 미 의회, 이산가족상봉안 초당적 지지(4/22, 자유아시아방송)

- 한국 전쟁 참전군인인 민주당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은 지난 21일 ‘한인이산가족상봉촉구결의안(Encouraging reunion of divided Korean American families)’을 의회에 제출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60년 동안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는 한인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랭글 의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속한 민주당의 최다선, 최고령 하원의원으로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랭글 의원은 의정 활동의 마지막 결실로 이산가족의 숙원을 이루고 싶다고 밝히면서 한국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80대와 90대 고령이니만큼 가족 상봉의 기회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결의안이 제출된 하원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60년 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다며, 결의안이 이들의 상봉을 돕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표 발의자인 랭글 의원 대변인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과 다시 만나도록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 한편, 랭글 의원이 제출한 ‘한인 이산가족 상봉촉구결의안’은 한반도 분단으로 1천만명의 한국인이 서로 떨어져 살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남북한 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간간히 열리고 있음에도 한국계 미국인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북한 당국에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 내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촉진할 친선을 지속적으로 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5. 납북자

- 특이사항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7. 대북지원

- 北지원 실적 없는 단체도 대북지원사업 할 수 있다(4/22, 연합뉴스)
 - 정부는 대북지원 실적이 없는 단체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북지원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22일 밝혔다.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오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현행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에서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했다.
 - 임 대변인은 "(기존) 요건을 충족하려면 신규 민간단체도 대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춰야 하는 상황으로, 신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참여에 행정적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정된 규정은) 모자보건 및 농축산 산림 등 민생협력분야에서 민간단체의 내실있는 대북지원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그는 "다만, 민간차원 대북지원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시 단체의 방북 및 접촉 경험 및 역량, 인도적 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사업자 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올해 복합농촌단지 조성 및 모자보건 사업 등 다양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이번 자격 요건 완화에 따라 국내 관련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음.
-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하에 그동안 인도적 지원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 미 구호단체, 북한에 고기통조림·의약품 지원(4/23, 미국의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최근 북한에 고기 통조림과 담요, 의약품을 보냈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지난 7일 두 컨테이너 분량의 식료품과 담요, 의약품을 보냈다고 말했다.
- 지원품은 오는 6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 단체가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과 요양원 등에 보내질 것이라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다.
- 올 들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북한에 지원품을 보낸 것은 지난 2월 말에 두 번째임.
- 이 단체는 앞서 황해남북도 내 병원 두 곳에 태양열 패널과 물 저장탱크, 파이프 등 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보냈음.
- 스미스 국장은 북한에 지원한 물품을 확인하고 분배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 동부 노스 캐롤라이나 주 블랙마운틴에 본부를 둔 대북 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북, 대북 지원 국제단체에 압박 심해”(4/24, 자유아시아방송)

-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지원단체 관계자는 대북 지원활동을 하는 유럽연합 단체들이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이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을 주도한 데 대해 북한이 평양에

- 상주하는 유럽의 인도적 지원 단체에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을 떠날 것을 요구했던 2005년의 긴장 상황 같다는 설명임.
-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중압감은 북한 외무성 내 유럽의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조선-유럽연합협력조정처(KECCA)’를 통제하는 북한 공안기구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음.
 - 유럽연합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2003년 이후 유엔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음.
 - 특히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한 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음.
 - 북한 현지 파트너 즉 협력자와의 접촉이나 사업현장 방문을 금하는 한편, 6개월마다 갱신하던 이 단체 평양 지부장의 입국사증을 매달 갱신하도록 요구했다는 설명임.

8. 북한동향

-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을 앞둔 원산육아원·애육원 현지지도(4.22,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총정치국장, 인민군 차수) 동행
 - 김정은은 원산육아원·애육원은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전진한다는 당의 뜻을 새기고 투쟁하고 있는 인민군대의 혁명관·미래관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국제아동절인 6월 1일에 준공식을 진행할 것을 지시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